

III 주요 사건사고 일지 III

■ 문재인 정부 1년 주요 일지

◇ 2017년

- 5.10 = 문재인 대통령 취임
- 5.10 = 1호 업무지시 '일자리 상황점검·일자리위원회 구성'
- 5.12 = 인천공항공사 방문으로 첫 공식 외부일정
- 5.12 =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업무지시
- 5.14 = 북한 중거리미사일 발사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 5.18 =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 5.25 =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 5.30 =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진상조사 지시
- 6.12 =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 6.19 = 6·19 부동산대책 발표
- 6.20 = 미국 오토 웨이버 군 사망에 조건
- 6.21 =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 주재
- 6.24 =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축사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제안
- 6.27 = 첫 국무회의 주재
- 6.30 = 한미 정상회담
- 7.4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 추정 미사일 발사에 따른 NSC 소집
- 7.6 = 한독 정상회담·한중 정상회담
- 7.6 = 독일 코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을 담은 '베를린 구상'(또는 베를린 선언) 발표
- 7.7 = 한일 정상회담·한러 정상회담
- 7.17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지시
- 7.28 = 북한 ICBM급 추정 미사일 발사에 따른 NSC 소집·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 지시
- 8.2 = 8·2 부동산대책 발표
- 8.8 = 가슴기살균제 피해 공식사과
- 8.16 = 세월호 유가족에 공식사과
- 9.3 =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NSC 소집. 문 대통령 "국제사회와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
- 9.5 = 한미 미사일지침상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
- 9.6 = 한러 정상회담
- 9.7 = 한일 정상회담
- 9.21 =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재차 제안
- 11.7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 정상회담
- 11.8~15 = 동남아시아 순방
- 11.24 = 경북 포항지진 피해 현장 방문
- 11.29 = 북한 ICBM급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NSC 소집

- 12.14 = 중국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
- 12.22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현장 방문

◇ 2018년

- 1.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대화 용의' 신년사에 환영의사 표명
- 1.3 = 판문점 연락채널 재가동
- 1.4 = 위안부 피해자 초청오찬
- 1.9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및 공동 보도문 채택
- 1.18 = 검찰조사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언급과 '정치보복' 발언에 "분노의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발언
- 1.27 = 밀양 화재참사 합동 분향소 방문
- 2.9 =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 방남
- 2.10 =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면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대통령 방북 초청' 친서 전달
- 2.11 =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함께 관람
- 2.23 = 방한한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과 만찬 접견
- 2.25 =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과 접견
- 3.5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 평양 파견
- 3.6 = 대북특별사절단, 4월 말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개최 발표
- 3.9 = 평창패럴림픽 개회식 참석
- 3.9 = 대북특별사절단,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중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향' 발표
- 3.13 = 국민헌법자문특별위 자문안 보고
- 3.22~28 = 베트남·UAE 순방
- 3.26 = UAE 방문 중 정부 개헌안 발의
- 3.29 =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 4.1 = 평양에서 남북평화협력기원 남한 예술단 단독공연 '봄이 온다' 및 남한 태권도시범단 단독공연
- 4.2 = 평양에서 남북태권도시범단 합동공연
- 4.3 = 제주 4.3 추념식 참석
- 4.20 = 남북 정상 핫라인 개통
- 4.27 =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 4.28 =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남북정상회담 결과 공유
- 4.29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고 남북정상회담 결과 공유

- 5.4 = 윤석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임명
- 5.4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남북정상회담 결과 공유

■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주요일지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주요 일지

2017

- 5.10 문재인 정부 출범
- 5.14 북,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 5.26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단체 대북접촉 승인
- 7.6 문 대통령, 독일 코르베저단 연설서 '베를린 구상' 발표
- 9.3 북, 제 6차 핵실험 단행

2018

- 1.1 북한 김정은 신년사,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 파견동의 밝힘
- 1.2 정부,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개최' 북에 제의
- 1.9 남북고위급회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북한 대표단 방남 합의
- 2.9 북한, 고위급대표단 파견
- 2.10 북 고위급대표단, 김 위원장의 문 대통령 평양 초청 의사 전달
- 3.5 대북특별사절단 평양 방문. 김정은 위원장 면담
- 3.29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 4.5~4.23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3차례 개최
- 4.27 **문 대통령·김 국무위원장 정상회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 5.24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 5.26 **문 대통령·김 국무위원장 정상회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 6.1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 7.4 남북통일농구경기 개최
- 7.31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서 'DMZ 유해 공동발굴·GP철수' 공감
- 8.9 북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 개최 제안
- 8.13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합의
- 9.5 대북 특별사절단(수석 특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평양 방문.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 9.6 정의용 안보실장,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 합의를 비롯해 '18일~20일 문재인 대통령 방북' 발표
- 9.14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실무협의 개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 9.18~20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평양)
- 9.19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및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 채택
- 9.20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백두산 동반 방문

■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부터 보석 석방까지

◇ 2017년

- 10.13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오피스넬캐피탈 대표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 검찰 고발
 - 12.7 = 참여연대·민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 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횡령, 범죄 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12.22 = 검찰,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 별도 편성.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 설치

◇ 2018년

- 1.11 = 검찰, 경주 다스 본사·이상은 회장 자택·이영배 금강 대표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 수색
- 1.12 = 검찰, 'MB 청와대 측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자택 압수수색,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본격 수사 개시
- 1.22 = 검찰, 역대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로 'MB형'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25 = 검찰,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임차공간 압수수색, 다스 미국 소송 대응 방안 'VIP 보고서' 문건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 다수 발견
- 1.31 = 검찰, 서울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다스 지분 처리 방안 등 담긴 'PPP 기획안' 문건 등 확보
- 2.5 = 검찰, 국정원 특별비 수수 '방조범' 김백준 구속기소,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
- 2.8 = 검찰,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 밤샘 압수수색,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지원한 정황 포착
- 2.12 =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긴급체포,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리스트 확보
- 2.19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활동 종료, 120억 횡령금 '개인 횡령' 결론, 다스 실소유주 관계입증 자료 확보
- 2.21 = 검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금품공여 메모·비망록 등 확보
- 3.4 =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 구속기소
- 3.9 =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기소
- 3.14 = 검찰,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 3.19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3.22 = 법원, 영장실질심사 대신 서류심사 거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검찰, 구속영장 집행, 동부구치소 수감

- 4.9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배당
- 4.18 = 법원, 논현동 주택·공장 등 이 전 대통령 재산 111 억원 동결 결정
- 5.3 =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 5.23 = 이 전 대통령, 첫 정식공판 출석. "검찰이 무리한 기소" 주장
- 7.6 =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 7.26 = 'MB 집사' 김백준, 1심서 뇌물 무죄 선고, 횡령 혐 의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 8.13 =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1심서 징역 3년·집행유 예 4년 선고
- 9.4 = 이 전 대통령 피고인 신문, 50분간 검찰 질문에 진 술 거부
- 9.6 = 검찰, 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서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천131만원 구형
- 10.5 = 서울중앙지법,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여원 선고
- 10.11 = 검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10.12 =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10.23 = 서울고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에 항 소심 사건 배당
- 11.2 = 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돼 형사부에 재배당
- 12.12 =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이 전 대통령 측, 1심 전 략 바뀌 증인 22명 신청
- 12.26 =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15명 증인으로 채택

◇ 2019년

- 1.2 = 항소심 첫 정식공판
- 1.9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소환장 송달 안 돼 증인 신문 불발
- 1.11 = 이 전 대통령의 처남택 권영미 씨,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아닌 남편이 물려 준 내 것"이라고 증언
- 1.16 =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소환장 송달 안 돼 증인신문 불발
- 1.23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소환장 송달 안 돼 증인신문 불발
- 1.29 =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 있다"며 보석 청구
- 2.12 = 이 전 대통령 측, 계속된 증인신문 불발에 "증인 불출석할 경우 구인해달라"며 '절차 진행 관한 의견서' 재 판부에 제출
- 2.14 =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 변경
- 2.15 = 이 전 대통령 보석 심문기일
- 2.18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모두 소환장 송달 안 돼 증인신문 불발
- 2.25 = 법원 정기 인사로 주심 판사 변경

- 2.27 = 재판부, 공판기일 추후지정하기로 하고 향후 심리 진행 방향 정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 진행
- 3.6 = 재판부,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 및 접견·통신 대상 제한 등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

■ 기무사령부 계엄문건 작성 의혹 주요 수사상황 일지

- 7.5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 건 공개
- 7.10 = 문재인 대통령, 계엄문건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
- 7.16 = 기무사 계엄문건 규명 특별수사단 출범
- 7.18 = 특수단, 계엄령 문건 작성 관여 기무사 실무자 3명 소환조사
- 7.20 = 청와대 계엄문건 세부자료 공개
- 7.23 = 국방부·법무부 합동수사기구 구성 협의
- 7.25 = 특수단, 계엄문건 기무사령부 압수수색,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 소환조사
- 7.26 = 특수단,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소환조사
- 7.26 = 군·검찰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공식 출범
- 8.5 = 합수단,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조현천 전 기무사 령관 자택 압수수색
- 8.6 = 합수단, '계엄사령관 거론' 장준규 전 육참총장 압수 수색
- 8.14 = 합수단, 기무사령부·국방보안연구소 압수수색
- 8.16 = 합수단, '계엄임무수행군 부대' 15곳 방문 지휘관 들 참고인 조사
- 8.20 = 합수단,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 장모씨 참고인 조사
- 8.22 = 합수단, '계엄문건 검토'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 리관 소환조사
- 8.23~24 = 합수단,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당시 보좌관 9 명 사무실 압수수색
- 9.1 = 합수단, '계엄문건 작성'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 소 환조사
- 9.4 = 합수단, 계엄임무 수행부대 2~3곳 압수수색
- 9.20 = 합수단, 국방부·육군본부 압수수색
- 9.20 = 법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발 부, 합수단, 인터폴 수배요청 및 여권무효화 등 후속조치 시작
- 10.2 = 외교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여권반납 통지
- 10.16 = 합수단, 인터폴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수배 요청
- 10.18 = 합수단,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김관진 전 청와 대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 10.26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 11.6 = 합수단, 중간수사결과 발표, 박근혜 前대통령, 황 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참고인 증지, 조현천 전 기 무사령관 기소 증지

■ 미군 용산기지 공원조성 주요 일지

미군 용산기지 공원조성 주요 일지



광복 이후(1945년~) 기준

1945년 9월 미24군단 예하 7사단 병력 인천상륙 후 용산기지 진주
1952년 2월 대한민국 정부, 용산기지를 미군에 정식으로 공여
1953년 9월 미8군사령부 동송동에서 용산기지로 이전
1957년 7월 도쿄 유엔군사령부가 용산기지로 이동 (주한미군사령부 신설)
1978년 11월 용산기지에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2003년 5월 한미정상 용산기지 평택이전 합의
2005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용산기지 국가공원 추진 발표
2007년 7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
2011년 5월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7년 7월 용산기지내 미8군 사령부 평택미군 기지로 이전
2018년 6월 용산기지내 주한미군사령부 평택미군기지로 이전
~현재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안) 수립 중
11월 2일 '용산기지 버스투어' 시작

연합뉴스 자료/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단

■ 제주4·3 발발 및 진상규명·명예회복 사업 일지

- 1947.3.1 = 제주민전 주최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 발포로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
- 1947.3.10 = '3·1사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 돌입. 13일까지 제주도 전체 직장 95%인 166개 기관·단체 동참
- 1948.4.3 = 무장봉기 발발. 남로당 제주도당 주도로 무장대가 경찰 등의 탄압에 항의하며 제주도 내 12개 지서를 공격하고 우익단체 요인 집을 습격. 경찰 4명,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 사망
- 1948.10.17 = 제주 해안에서 5km 이상 중산간 지역 통행 금지 명령. 어길 시 총살한다는 포고문 발표. 이후 중산간 마을 곳곳 초토화, 주민 집단총살
- 1948.11.17 = 이승만 정부,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 선포
- 1949.1.17 = 토벌대, 조천면 북촌리 불태우고 주민 400명가량 집단총살. 훗날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 배경 이 됨
- 1950.8.20 = 모솔포경찰서 관내 예비검속자 344명 중 252명 첫알오름에서 집단총살. 6년 뒤 유족들이 군경의 눈을 피해 유골을 수습, 백조일손지묘를 세움
- 1954.9.21 = 한라산 금죽 구역 해제
- 1960.5 = 4·19 혁명 이후 4·3 진상규명 움직임 시작됐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
- 1978 = 소설 '순이 삼촌',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발표, 금기시되던 4·3 공론화되기 시작
- 1989.4 = 제주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준위) 첫 대중적 추모행사 개최
- 1993.3.20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출범
- 1994.4.3 = 제주시 탐동매립지에서 공준위와 유족회가 함께 주최한 첫 합동 위령제
- 1995.5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 피해조사 제1차 보고서 발간
- 1999.3.8 =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결성
- 1999.12.16 =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0년 1월 12일 공포
- 2000.3.3 = 행정자치부에 제주 4·3 처리지원단 설치
- 2000.5.10 = 4·3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포
- 2000.8.28 =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
- 2001.9.27 = 헌법재판소, 4·3 특별법 위헌심판 청구 각하
- 2002.11.20 = 4·3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
- 2003.4.3 = 고건 국무총리 제55주년 4·3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참석. 4·3평화공원 조성 착공
- 2003.10.15 = 4·3 진상보고서 확정
- 2003.10.31 = 노무현 대통령,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가진 제주도민과 오찬간담회에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4·3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 표명

- 2005.1.27 =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
- 2006.2.8 = 4·3 유족회, 제58주년 4·3 범도민 위령제에 노무현 대통령 공식 초청
- 2006.4.3 = 4·3 희생자 위령제 대통령 첫 참석
- 2008.10.16 = 4·3평화재단 설립
- 2013.8.2 = 4·3희생자유족회·제주도재향경우회 '화해와 상생' 선언
- 2014.3.18 = 4·3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 2014.4.3 = 제66주년 4·3희생자추념식 처음 국가의례로 봉행
- 2017.4.19 = 4·3 수형희생자 중 18명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 2018.3.21 =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국 최초 지방공휴일로 지정

■ 백남기 농민 사건 일지



백남기 농민 사건 일지

- 2015.11.14 고(故)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 맞고 의식 불명
- 11.18 백씨 가족,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최모 경장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2016.8.9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살수 재연 실황조사
- 9.25 백씨 사망, 주치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 사인 '병사로 기재'
- 9.29~10.20 경찰, 유족에게 6차례 부검 협의 요청했으나 유족 측 거절
- 2017.6.16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 백씨 유족에 공식 사과
- 10.17 서울중앙지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 2018.2.6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 백씨 사망 조사 착수
- 2.7~2.8 서울중앙지법, 백씨 유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
- 6.5 서울중앙지법,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 신윤균 총경 벌금 1천만원, 살수 요원 한모 경장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 벌금 700만원 선고
- 8.2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직사 살수와 이를 지시한 행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이었다고 결론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추진경과 일지

- ◇ 1997년
- 12월 =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 내세운 김대중 대통령 당선
- ◇ 2004년
- 9월 = 노무현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 발족
- ◇ 2006년
- 7월 = 제주도 자치경찰제 실시
- ◇ 2010년
- 2월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
- 5월 = 이명박 정부,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 구성
- ◇ 2011년
- 6.30 = 국회,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 12.27 = 국무회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대통령령 제정 의결,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는 내용이 골자
- ◇ 2012년
- 10월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검·경 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 공약 제시
- ◇ 2016년
- 1.14 =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경찰 미래비전 2045' 발표, 주요 정책 과제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선정
- 9.26 = 경찰청, 수사권 조정 전담기구 '수사구조개혁단' 출범
- ◇ 2017년
- 5.9 =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약 내건 문재인 대통령 당선
- 6.16 = 경찰청, 민간 인권전문가 참여 경찰개혁위원회 발족,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방안 및 자치경찰 모델을 연구·검토 논의
- 7.19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하반기 도출 및 2018년부터 시행 방침 포함
- 7.24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 유지 주장
- 8.17 = 경찰청, 경찰개혁추진태스크포스(TF)팀과 수사구조개혁단 등 개별 추진단 통합 '경찰개혁추진본부' 발족
- 10.20 = 문재인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강조
- 11.2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방안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

◇ 2018년

- 1.14 =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
- 2.8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 발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강화 방향
- 4.20 = 청와대, 검찰과 경찰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수렴 공문 발송
- 6.21 =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경찰관 징계 요구로 견제

■ '성추행 조사단' 출범에서 수사결과 발표까지

- 2018.1.29 =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 폭로
- 1.31 =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출범
- 2.4 = 서지현 검사, 조사단 출석해 피해 사실 진술
- 2.8 = 조사단, 검찰 내부 성범죄 피해사례 접수 시작
- 2.12 = 조사단, '부하여성 성추행' 의혹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 2.14 = 조사단, '부하여성 성추행' 의혹 현직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 2.15 = 법원, '부하여성 성추행' 의혹 현직 부장검사 구속영장 발부
- 2.21 = 조사단, '부하여성 성추행' 의혹 현직 부장검사 구속기소
- 2.22 = 조사단, 서지현 검사 부당인사 의혹 관련 법무부 검찰국 출신 부산지검 이모 부장검사와 신모 검사 압수수색
- 2.26 = 조사단, 안태근 전 검사장 피의자 소환 조사
- 2.27 = 조사단,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전직 검사 수사 착수
- 3.3 = 조사단,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전직 검사 입국시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
- 3.5 = 조사단, 안태근 2차 소환 조사
- 3.6 = 문무일 검찰총장, 조사단 '구속영장 청구' 수사보고에 보강수사 지시
- 3.12 = 조사단,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전직 검사 소환 조사
- 3.24 = 서지현 검사, 조사단 두 번째 출석해 진술
- 3.26 = 조사단, 안태근 3차 소환 조사
- 3.28 = 조사단,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전직 검사 1차 구속영장 청구
- 3.30 = 법원,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전직 검사 구속영장 기각
- 4.8 = 전문수사지문위원, 조사원료 및 조사단에 수사결과 제출
- 4.9 = 문무일 검찰총장, 안태근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

- 4.10 = 조사단,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전직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 4.11 = 법원, 1심에서 '부하여성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4.12 = 법원,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전직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도 기각
- 4.13 = 수사심의위, 안태근 '구속 기소' 심의 결과 의결
- 4.16 = 조사단,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 4.17 = 조사단,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준유사강간' 혐의 현직 검찰수사관 등 2명 불구속 기소
- 4.18 = 서울중앙지법,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범죄 성립 여부 다들 부분 많다" 사유
- 4.18 = 조사단,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현직 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 4.24 = 조사단, '후배 여검사 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 4.25 = 조사단, 안태근 전 검사장 '인사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 4.26 = 조사단, 수사결과 발표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 2017년

- 3.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에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의혹 제보 접수
- 5.5 = 선관위, 검찰에 드루킹 등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 혐의로 수사 의뢰
- 10.16 = 검찰, 내사 끝에 드루킹 등 무혐의 처분

◇ 2018년

- 1.19 = 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 1.31 = 더불어민주당,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경찰에 고발
- 3.21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드루킹 등 3명 체포
- 4.17 = 검찰, 드루킹 '평창기사 여론조작' 혐의 우선 기소
- 6.7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 6.13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 6.27 =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수사 개시
- 6.28 = 특검, 드루킹 일당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7.1 = 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소환조사
- 7.2 = 특검, 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 7.5 =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3사 압수수색, 드루킹 공범 '솔본 아라타' 소환조사
- 7.6 = 특검, 드루킹 공범 '둘리' 우모씨·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 7.10 = 특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 휴대전화 2개,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불법자금 수수 의혹' 노회찬 의원 부인의 전 운전기사·'파로스' 김모씨 소환조사

- 7.17 =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전달 기획' 도모 변호사 긴 급체포,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 7.18 =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노회찬 의원, '여야 5당 원내대표 미국 순방' 출국
- 7.19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소환조사
- 7.20 = 특검, 드루킹 일당 4명을 '킹크랩' 2차 버전 가동해 댓글 22만 1천729개에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로 추가기소
- 7.22 = 노회찬 의원, 귀국
- 7.23 = 노회찬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서 투신 사망
- 7.27 = 법원, 드루킹 공범 '초췌·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 8.2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관사,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8.6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
- 8.8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 8.9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소환
- 8.12 = 특검, 송인배 청와대 정무 비서관 참고인 소환
- 8.15 = 특검, 백원우 청와대 민정 비서관 참고인 소환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
- 8.18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기각
- 8.22 =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포기 발표
- 8.24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드루킹 일당도 댓글 118만개에 8천 800여만번 호감수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12명 일괄 처리
- 8.25 = 특검, 수사 기간 종료
- 8.27 =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9.21 =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 10.29 = 김경수 지사, 1차 정식 재판에 출석
- 12.26 = 특검팀,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 12.28 = 특검팀, 김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 2019년

- 1.30 = 법원, 드루킹에 컴퓨터장애업무방해·뇌물공여 등으로 징역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집행유예 선고
=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2017년

- 3월 5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 판사의 행정처 발령이 반복됐다는 의혹 보도
- 17일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 4월 7일 대법원이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 6월 19일 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 고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 7월 24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2차 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요구

2018년

- 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대법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고발 사건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
- 2월 12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 5월 25일 특별조사단,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 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 31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6월 5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 18일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 7월 21일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31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 9월 10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 10월 27일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 11월 6일 검찰,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 14일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장 구속기소
- 19일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2월 3일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 7일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9일 검찰,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관련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 조사
- 20일 검찰,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조사

2019년

- 1월 7일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 8일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 9일 검찰,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소송 등을 두고 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
- 11일 검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수사 착수 이후 7개월, 양 전 대법원장 퇴임 후 1년 4개월 만



■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일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일지

- 1968.7 대법원 "종교인의 양심적 결정으로 군 복무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병역거부자 처벌 판결 확정
- 2004.5.21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 7.15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30여년 만에 다시 확정
- 8.26 헌법재판소,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 (합헌 7명·위헌 2명)
- 2011.8.30 헌법재판소,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 (합헌 7명·위헌 2명)
- 2016.10.18 광주지법 항소부, 첫 2심 무죄 판결
- 2018.2.1 부산지법 항소부, 두 번째 2심 무죄 판결
- 6.18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
- 6.28 헌법재판소,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 (합헌 4명·일부위헌 4명·각하 1명)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8.30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사건 공개변론
- 11.1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 5.25 = 감리위 2차회의
- 5.31 = 감리위 3차회의
- 6.7 = 증권선물위원회 1차회의 대심제로 진행
- 6.12 = 증선위 2차회의(임시회),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도 검토기로
- 6.20 = 증선위 3차회의 대심제로 진행
- 6.21 = 증선위,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 보완 요청
- 6.29 =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공시
- 7.4 = 증선위 4차회의
- 7.12 = 증선위 5차회의, 고의 공시누락 인정했으나 지배력 변경 판단은 보류하고 금감원에 재감리 요청
- 7.13 = 금감원, 증선위 재감리 요구 수용
- 7.19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9.28 =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 콜옵션 주식 양도 1개월 연기" 공시
- 10.8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고의 공시 누락 판단 행정소송
- 10.19 =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포춘지 '유망 기업 50' 선정
- 10.31 =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조치안 첫 심의
- 11.6 =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젠, 콜옵션 자산양수도 종결 공시
- 11.7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 공개
- 11.14 =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판단,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 정지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유지 판단 일지

- ◇ 2015년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자회사 삼성바이오에 피스 회계처리 변경
- ◇ 2016년
- 11.10 = 삼성바이오로직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분식회계 의혹 제기
- ◇ 2017년
- 3월 말 =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착수
- ◇ 2018년
- 5.1 =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조치사전통지 사실 공개
- 5.2 = 삼성바이오로직스, 긴급 기자회견서 "분식회계 아니다" 반박
- 5.8 =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 5.17 =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 감리위원회 1차회의
- 5.18 =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의사 공시

- 12.10 =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론

■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 투자까지 4년의 여정

- 2014.6 = 윤장현 전 광주시장,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 내걸고 취임
- 2014.9 = 전담 조직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신설
- 2015.8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 2017.7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포함
- 2018.6 = 현대차, 광주시에 투자의향서 제출
- 2018.9 = 한국노총 불참 선언
- 2018.10 = 한국노총 재참여 3차례 원탁회의
- 2018.11.1 = 노동계 입장 반영한 협상안 마련
- 2018.11.2 = 광주시·노동계·전문가 참여한 투자유치 추진단 출범
- 2018.11.12 = 이용섭 시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면담

- 2018.11.13 = 투자유치추진단, 노동계와 4가지 원칙 합의
- 2018.11.27 = 노동계, 시에 협상 전권 위임
- 2018.12.4 = 현대차와 투자 합의
- 2018.12.5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합의안 수정 의결, 현대차 수용 거부로 무산
- 2018.12.6 = '광주형 일자리 반대' 현대·기아차 노조 부분파업
- 2018.12.9 = 이용섭 시장 "협상팀 재정비...협상 직접 나서" 선언
- 2019.1.14 = 광주시, 노사 상생 도시 선언
- 2019.1.16 = 박병규 광주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 취임...재협상 본격화
- 2019.1.29 = 광주시·현대차 합의안 마련
- 2019.1.30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합의안 의결
- 2019.1.31 = 광주시·현대차 투자 협약식 예정

■ BMW 사태 차량 화재부터 사고원인 조사 발표까지

- 2018.1.2 = BMW 2013년식 X6 차량에서 올해 첫 화재 발생
- 6.25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BMW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자료 요청
- 7.5 = 자동차안전연구원, BMW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자료 재요청...BMW '원인 규명 중' 답변
- 7.14 = BMW 20번째(520d) 화재 발생
- 7.16 =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BMW 제작결함 조사 지시
- 7.26 = 국토부, BMW 10만6천317대 자발적 리콜 발표
- 7.30 = BMW 차주 4명, 서울중앙지법에 BMW 상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
- 8.3 = 김현미 국토부 장관, BMW 리콜 대상 차량 운행 자체 권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
- 8.6 = 김호준 BMW 그룹 코리아 회장, 대국민 사과
- 8.8 = 국토부, 운행정지 명령 검토 방침 및 리콜제도 보완 방안 발표
- 8.9 = BMW 35번째(320d), 36번째(730Ld) 화재 발생 BMW 차주들, 남대문경찰서에 BMW 고소 "결함 은폐 의혹"
- 8.11 = 국토부·교통안전공단 합동 BMW 차량 화재 리콜 관련 전담 TF 가동
- 8.13 = BMW 39번째(M3 컨버터블) 화재 발생
- 8.14 = 국토부, BMW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 발동 발표
- 8.20 = BMW 코리아, 차량 리콜 본격 시행
- 9.6 = 국토부, 결함은폐 자동차 제조사에 매출액의 3%, 징벌적 손해제 강화 등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방안 발표
- 11.7 =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조사결과 발표 "차량 화재 원인, 회사측 발표한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바이패스' 아닌 'EGR 밸브' 문제일 수 있어"
- 12.24 =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 "EGR 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 확인, 설계 결함 추정", 결함은폐·능장리콜 형사고발 및 과징금 112억원 부과

■ 문재인 정부 역대 부동산 대책 일지

문재인 정부 역대 부동산 대책 일지

2017년

6·19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의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

8·2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금융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10·24 대책

가계부채종합대책

2018년 신 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 관리,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부실가구 및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11·29 대책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생애주기·계층별 주거지원 방안, 향후 5년간 공적지원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수립 등.

12·13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

2018년

7·5 대책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구체화.

8·27 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수도권 내 30만호 이상 주택공급 가능한 공공택지 30여곳 추가 개발,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지정.

9·13 대책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 최고세율 최고 3.2% 중과

-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및 세율 0.2%포인트 인상 등

■ 쌍용차 사태 주요 일정

쌍용차 사태 주요 일정

2009
 1월9일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2월6일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4월8일 쌍용차 '2천646명 구조조정안' 발표
 5월21일 노조 총파업 돌입
 8월5일 경찰, 강제진압 완료

2010
 5월10일 쌍용차 매각 공고
 11월23일 인도 마힌드라, 쌍용차 인수

2011
 3월14일 법원,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종료 결정

2012
 7월4일 노사, 임단협 타결, 무급휴직자 자녀 학자금·우리사주 지급
 11월20일 전 노조지부장 등 3명, 송진탐 고공농성, 국정조사 요구

2013
 1월10일 노사, 무급휴직자 455명 3월 1일자 전원복직 합의
 희망퇴직자 1,904명·정리해고자 159명 제외

2014
 2월7일 쌍용차 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승소
 1심 당사자 중 사망 1명·항소심 포기 5명 제외
 11월13일 대법원,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2015
 9월16일 서울고법, 쌍용차 노조, 회사 측에 33억원 배상 판결
 12월30일 노사 해고자 복직 합의

2016
 5월13일 서울고법, 쌍용차 노조, 각가에 11억8,000만원 배상 판결

2018
 6월27일 30번째 해고자 사망
 7월3일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재설치
 8월7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 취하 권고
 9월14일 노사, 해고자 119명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 합의







■ 전공노 출범부터 합법화까지 일정

- 2001.3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출범
- 2001.10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추진기획단 구성
- 2002.3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 2004.11. 15~17 = 전공노,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 이 빠진 공무원노조 특별법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
- 2005.11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창립
- 2006.1 = 공무원노조법 발효되며 정부 수립 이후 공무원 노조 활동 최초로 합법화
- 2006.3 = 조합원 총투표 결과 70%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

- 2007.6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출범
- 2009.9 =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
- 2009.10 = 통합 이후 정부는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법외 노조로 규정
- 2009.12 = 정부에 1차 노조설립신고서 제출했으나 반려
- 2010.2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명칭 개정, 정부에 2차 노조설립신고서 제출했으나 반려
- 2012.3 = 정부에 3차 노조설립신고서 제출했으나 반려
- 2013.5 = 정부에 4차 노조설립신고서 제출했으나 반려
- 2015.12 =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 2016.3 = 정부에 5차 노조설립신고서 제출했으나 반려
- 2016.5 = 성과급제 폐지 위한 공무원·교사 2만인 선언
- 2016.11 = 공무원·교사 시국 선언
- 2018.3.24 =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 상정, 찬성률 77.1%로 가결
- 2018.3.26 = 정부에 6차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 2018.3.29 = 고용노동부, 전공노에 설립신고증 교부

■ 北역류 미국인 석방 일정

- 2009.3.17 = 북중 접경지대 취재 중이던 미국 커런트 TV 소속 로라 링·유나 리 기자, 북한 당국에 억류
- 2009.8.4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로라 링·유나 리 기자 석방 교섭차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동
- 2009.4.5 = 클린턴 전 대통령, 석방된 기자들과 함께 귀국
- 2009.12.25 = 북한,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불법 입북 혐의로 체포
- 2010.1.25 = 북한, 불법 입북 혐의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억류
- 2010.2.6 = 북한, 로버트 박 석방
- 2010.4.7 = 북한, 곰즈에 노동교화형 8년 선고
- 2010.8.25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 2010.8.27 = 카터 전 대통령, 곰즈 데리고 귀국
- 2011.4.14 = 조선중앙통신, 2010년 11월 한국계 미국인 전 용수씨 체포 사실 공개

- 2011.5.28 = 전용수씨, 로버트 킹 전 미국 대북인권특사와 함께 귀국
- 2012.11.3 = 케네스 배, 함경북도 나진항 통해 관광 명목으로 입국했다가 체포
- 2012.12.21 = 조선중앙통신, 케네스 배 억류 사실 보도
- 2013.4.30 = 북한, 케네스 배에 '반공화국 적대범죄'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 2013.8.27 = 미국 국무부, 30일 로버트 킹 국무부 인권특사 방북계획 발표
- 2013.8.30 = 킹 특사 방북초청 철회
- 2014.2.7 = 조선신보, 킹 특사 방북 계획 보도
- 2014.2.9 = 북한, 킹 특사 방북 초청 취소
- 2014.4.25 = 북한, 미국인 매튜 토드 밀러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고의로 비자를 찢는 등 망동을 부려 억류했다고 발표
- 2014.4.29 =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북한 입국
- 2014.5.7 = 북한, '성경책 유포' 혐의로 파울 체포
- 2014.6.6 = 조선중앙통신 '파울 억류' 발표
- 2014.6.30 = 조선중앙통신 "파울 기소 준비" 발표
- 2014.9.1 = 케네스 배·밀러·파울 등 억류 미국인 3명, 북한이 허용한 CNN 개별인터뷰에서 "미국 정부 적극 나서야" 주장
- 2014.9.14 = 북한, 매튜 토드 밀러에 6년 노동교화형 선고
- 2014.10.21 = 북한, 파울 석방
- 2014.11.9 = 북한,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 석방
- 2016.1.11 = 목사 출신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씨 북 억류 사실 CNN 통해 보도
- 2016.1.2 =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 북한 여행 중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
- 2016.2.29 = 웬비어, 평양에서 기자회견 열고 '범죄행위' 사죄
- 2016.3.16 = 북한, 웬비어에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 2016.3.25 = 김동철씨, 평양 기자회견에서 혐의 인정·선처 호소
- 2016.4.29 = 북한, 김동철씨에 국가전복 음모·간첩 혐의로 10년 노동교화형 선고
- 2017.4.21 = 중국 연변과기대 교수 출신인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방북 일정 마치고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 중 북한 당국에 체포
- 2017.5.3 = 조선중앙통신, 적대행위 혐의로 김상덕씨 체포 사실 발표
- 2017.5.6 = 북한, 평양과기대 봉사자인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씨 평양역에서 체포
- 2017.5.7 = 조선중앙통신, 적대행위 혐의로 김학송씨 체포 사실 발표
- 2017.6.12 =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평양 방문해 웬비어 등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 접견
- 2017.6.13 = 웬비어, 혼수상태로 석방
- 2017.6.15 = 조선중앙통신, 웬비어 석방 뒤늦게 보도

- 2017.6.19 = 웬비어, 귀국 엿새 만에 사망
- 2017.9.1 = 미국 정부, 웬비어 사망 계기로 북한 여행 금지 시행
- 2018.5.2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에서 한국계 미국인 3명 석방 가능성 시사
- 2018.5.9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북한 방문해 억류 미국인 3명과 동반 귀국길

■ 미중 무역전쟁 주요 진행 상황

◇ 2018년

- 3.22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관세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서명
- 3.23 = 중국, 돈육 등 30억 달러(약 3조1천900억원)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예고
- 4.2 = 중국, 미국산 돈육 등 8개 품목에 25%, 120개 품목에 15% 관세 부과
- 4.3 = 미국, 중국산 통신장비 등 25% 관세부과 대상 500억 달러 규모 품목 발표
- 4.4 = 중국,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부과 방침 발표
- 5.3~4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5.17~18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5.28 = 미국,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 25% 고율 관세부과 강행방침 발표
- 6.2~3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6.18 = 트럼프,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경고
- 7.2 = 중국, 미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 중국 내 판매 금지
- 7.6 = 미중, 상호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 7.10 = 미국,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재보복 조치로 2천억 달러에 10% 관세부과 계획 발표(9월 발효 예정)
- 8.22~23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8.23 = 미중, 상호 16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 9.24 = 미국,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중국,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 12.1 = 미중 정상, G20 정상회의에서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 합의

◇ 2019년

- 1.7~9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1.30~31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14~15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19~20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21~24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24 = 미국,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보류